

---

2026 - 5호  
(2026. 9월 둘째 주)

---

# 정책 동향

◆ 국정 동향

◆ 시정 동향

◆ 타시도 동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https://council.jeonnam-gwangju.go.kr> / 062-613-5194

# 목 차

## I. 국정 동향 ..... 1

- ① 【법제처】 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 국토부 소관 법령부터 ..... 1
- ②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5개년 기본계획 최초 수립 ..... 2
- ③ 【국토교통부】 코레일·에스알 통합, 고속철도 서비스 대전환 ..... 10

## II. 시정 동향 ..... 13

- ① 【상수도사업본부】 ‘AI 활용 수질예측·조기경보 시스템’ 첫 개발 ..... 13
- ② 【예산담당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추경 예산 3천458억 편성 .... 15
- ③ 【미래차산업과】 전남광주특별시·울산시, 자동차산업 AI 전환 ..... 17

## III. 타시도 동향 ..... 18

- ① 【서 울】 중소 건설사 공사비 산정 지원, 공사절차서·해설서 전국 최초 보급 ... 18
- ② 【강 원】 전국 최초 곤충산업 거점단지 준공, 그린바이오 시장 선 ..... 22
- ③ 【경 남】 기본사회 정책 발굴·실행체계 마련 ..... 23

# 국 정 동 향

1

## 법제처, 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 국토부 소관 법령부터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가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힘.
- 법제처는 올해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발굴·정비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3,500여 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300여 개를 검토함.
- 전수조사가 먼저 완료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부터 정비에 착수했으며, 과징금 독촉 절차 및 인용조문 정비 등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대통령령 25건과 부령 21건을 일괄정비함.
- 특히 공통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통합해 대통령령 25건, 부령 21건을 일괄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법제처는 연내 3,500여 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부처의 소관 법령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률에 어긋나는 과징금 독촉·징수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규정을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를 통해 국가 법령 체계의 정합성과 전반적인 법령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법제처는 올해 안에 3,500여 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 법령의 일괄정비도 연내 순차 추진할 계획임.
- 법제처장은 행정법령 전수조사와 일괄정비를 통해 국가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품질의 유지·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힘.

## 2

### 행안부 , 지역사랑상품권 5개년 기본계획 최초 수립

- 행정안전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최초의 법정계획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함.
-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이 시작된 이후,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함. 이후 2025년 발행 규모 확대와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상품권의 발행·유통·이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또한 정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 2025년 8월 26일 신설·개정되어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 발행 규모 반등 및 가맹점 확대

- 기본계획은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이후 상품권 운영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함.
- 실태조사 결과, 상품권 발행 지방정부는 2018년 66개에서 2025년 196개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일반 발행 규모도 2022년 정점 이후 일시 감소했으나 2025년 22조 4천억 원으로 반등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됨.
- 특히 결제수단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남. 발행 형태는 카드형(67.3%)과 모바일형(24.5%)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반면, 지류형은 8.2%로 감소세를 보임.
- 가맹점 수는 2020년 139만 6천여 개에서 2025년 237만 4천여 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가맹점은 7만 9천여 개에서 17만 6천여 개로 2배 이상 증가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에 따라 부정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예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부정 수취·불법 환전 건수는 2021년 102건에서 2025년 68건으로 감소했으며, 처분 건수도 102건에서 32건으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 지기본계획 3대 추진 전략 및 9개 중점 추진 과제

-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목표로 설정하고, ① 체계적 발행 ② 편리한 소비 ③ 합리적 관리의 3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본격 추진함.

|       |                                 |                       |                    |
|-------|---------------------------------|-----------------------|--------------------|
| 비전    | 지방 주도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                       |                    |
| 목표    |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                       |                    |
|       | 발행                              | 소비                    | 관리                 |
|       | 24.0조 ⇨ 31.2조                   | 생활 소비 ⇨ 가치 소비         | 수기·아날로그 ⇨ 데이터·시스템  |
| 추진 전략 | 자율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체계적 발행            | 지역성과 형평성을 반영하는 편리한 소비 | 협력과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 관리 |

〈① 자율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체계적 발행〉

- 먼저, 단년도 총액 중심 관리에서 목적·사업별 관리체제로 개편하고, 안정적인 상품권 발행을 위해 5개년 국비 지원 목표를 수립함.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개인 구매와 국비 지원 중심의 발행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각종 포인트의 상품권 전환 등 발행 재원을 다각화함.
- 또한 지방정부 우수 시책을 발굴·확산하고, 봉사·기부·환경활동 등 지역사회 기여와 연계한 참여형 상품권 모델을 활성화할 계획임.

## 〈② 지역성과 형평성을 반영하는 편리한 소비〉

- 생활 밀착형 소비를 넘어 가치 중심의 소비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별 상품권 소비 공백을 진단해 상품권 이용 기반을 확충함.
- 또한 행정구역 중심의 유통에서 벗어나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한 탄력적 유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해 가치소비를 활성화하고, QR결제·알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포용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③ 협력과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 관리〉

- 마지막으로, 기존 수기·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 중심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함. 이를 위해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금 지급 등 정책 발행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상품권 데이터를 표준화해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민간에 개방하여 신규 사업 창출을 지원함. 또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부정 유통 단속·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 □ 향후 추진 방향 및 기대 효과

-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단순 결제수단에서 지역 맞춤형 재정지원과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과 비수도권 민간소비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임.

- 정부는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견인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지방 정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비수도권 민간소비 회복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실질적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힘.

## 참고1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

### 《 발행현황 》

- (발행지역) 발행 지방정부 수는 지속 증가('18년 66개 → '25년 196개)

※ 부산, 대구, 인천 등은 광역 단위 상품권을 발행하여 전국적으로 상품권이 사용되고 있음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24년 | '25년 |
|------|------|------|------|------|----------|------|
| 66개  | 172개 | 185개 | 187개 | 188개 | 190개     | 196개 |

- (발행규모) 일발반행과 정책발행을 합산한 총 발행규모 역시 증가 추세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발행규모 | 17.0조원 | 27.9조원 | 29.6조원 | 22.4조원 | 19.0조원 | 26.7조원 |
| 일반   | 13.3조원 | 23.6조원 | 27.2조원 | 20.9조원 | 17.6조원 | 22.4조원 |
| 정책   | 3.7조원  | 4.4조원  | 2.4조원  | 1.4조원  | 1.4조원  | 4.2조원  |

- (발행형태) 카드형이 가장 큰 비중, 모바일형 확대, 지류형은 감소세

| 구분   | 발행 규모  | 지류형  | 모바일형  | 카드형   |
|------|--------|------|-------|-------|
| '25년 | 26.7조원 | 8.2% | 24.5% | 67.3% |

## 《 소비현황 》

- (전국 가맹점 수) '20년 139.6만 개에서 '25년 237.4만 개로 증가  
 ※ 인구감소지역 가맹점 수 : '20년 7.9만개 → '25년 17.6만개

| 구분   | 전체 가맹점 수 | 인구감소지역   |        |          |
|------|----------|----------|--------|----------|
|      |          | 가맹점 수    |        | 전년대비 증가율 |
|      |          | 전년대비 증가율 |        |          |
| '20년 | 139.6만개  | -        | 7.9만개  | -        |
| '21년 | 159.2만개  | 14.0%    | 11.2만개 | 42.7%    |
| '22년 | 174.3만개  | 9.5%     | 12.6만개 | 12.2%    |
| '23년 | 183.1만개  | 5.0%     | 13.9만개 | 10.4%    |
| '24년 | 188.1만개  | 2.7%     | 14.9만개 | 7.4%     |
| '25년 | 237.4만개  | 26.2%    | 17.6만개 | 17.8%    |

## 《 관리현황 》

- (부정유통) 부정수취·불법환전은 '21년 102건에서 '25년 68건으로 감소
  - 부정유통 관련 처분건수도 감소 추세('21년 102건 → '25년 32건)
  - ※ '21년 → '25년 : (과태료 부과) 14건 → 10건, (환수) 88건 → 22건

## 참고2

## 기본계획 체계도

비전

지방주도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목표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 발행            | 소비            | 관리              |
|---------------|---------------|-----------------|
| 24.0조 ⇨ 31.2조 | 생활 소비 ⇨ 가치 소비 | 수가아날로그 ⇨ 데이터시스템 |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 ① 자율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체계적 발행

- 1-1. 지역 맞춤형 상품권 발행
- 1-2. 상품권 발행 체계 다양화
- 1-3. 지역 자율성·창의성 강화

### ② 지역성과 형평성을 반영하는 편리한 소비

- 2-1. 지역별 소비 체계 최적화
- 2-2. 상품권 활용 가치소비 확대
- 2-3. 이용 형평성·편의성 제고

### ③ 협력과 시스템을 통한 합리적 관리

- 3-1. 상품권 협력 거버넌스 합리화
- 3-2.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강화
- 3-3. 부정유통 관리 체계화

### 참고3

### 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일정

| 추진과제                     | 세부 추진 내용                  | 일정      |
|--------------------------|---------------------------|---------|
| (1-1) 지역 맞춤형<br>상품권 발행   | ① 5개년 국비 지원 목표 수립         | '26~    |
|                          | ② 지원체계 정교화 및 발행 부담 완화     | '26~'28 |
| (1-2) 상품권 발행<br>체계 다양화   | ① 기업·법인·공공기관 구매 활성화       | '26~'30 |
|                          | ② 각종 포인트 상품권 전환 추진        | '26~    |
|                          | ③ 지역자산 수익 환류 모델 발굴·확산     | ~'28    |
| (1-3) 지역 자율성<br>및 창의성 강화 | ① 지방정부 우수시책 발굴·확산         | '26~'29 |
|                          | ② 지역사회 기여·사회공헌 연계 발행 활성화  | '26~'30 |
| (2-1) 지역별 소비<br>체계 최적화   | ① 지역별 소비 여건 진단 및 이용 기반 확충 | '26~    |
|                          | ② 지역 여건 반영 가맹점 등록 기준 운영   | '26~    |
|                          | ③ 생활권 반영 유통 지역 탄력화        | '26~    |
| (2-2) 상품권 활용<br>가치소비 확대  | ① 사회연대경제조직 기반 가치소비 활성화    | '26~    |
|                          | ② 가맹점 간 자율적 상품권 거래기능 확대   | '27~'30 |
| (2-3) 이용 형평성<br>및 편의성 제고 | ① 상품권 이용의 디지털 포용성 강화      | '26~'28 |
|                          | ② QR결제 확산 등 결제 편의성 개선 추진  | '26~'29 |
|                          | ③ 상품권 이용정보 알림서비스 고도화      | '26~    |
|                          | ④ 지급·결제 신기술 활용 발전모델 검토    | '27~    |
| (3-1) 상품권 협력<br>거버넌스 합리화 | ① 중앙-지방-민간 협력 거버넌스 보완     | '26~'30 |
|                          | ② 정책발행 관리체계 확립            | '27~    |
| (3-2) 데이터 표준화<br>및 활용 강화 | ①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제고         | '26~    |
|                          | ② 데이터 개방성 및 활용성 확대        | '27~    |
|                          | ③ 데이터 통합관리·정책지원 기반 고도화    | '27~    |
| (3-3) 부정유통<br>관리 체계화     | ① 통합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보완       | '26~    |
|                          | ② 부정유통 단속 관리 고도화          | '27~    |

## 3

**국토부, 코레일·에스알 통합, 고속철도 서비스 대전환**

-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의 기관통합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KTX와 SRT를 KTX로 통합해 본격 운행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좌석 공급 확대, 운임·마일리지 개선, 통합 예매 서비스 도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정부와 코레일은 최근 철도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통합 초기부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 안정적인 열차 운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 통합에 따른 조직·운영체계 전환 과정에서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기관사 교육·훈련, 중련열차 연결·분리, 이례상황 대응, 역사 혼잡관리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통합 전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연말까지 비상대응반을 상시 운영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례사항과 국민 불편사항에 신속 대응하고, 9월 중 수서 고속선 비상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임.
- 또한 필요 시 인력·시설 등을 보완해 통합 초기 운영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임.
-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발표 이후 전문가 토론회, 국회 공청회, 격주 노사정 협의체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통합 추진방향을 구체화함.

- 열차운행 통합을 위해 2월 교차운행과 5월 중련운행을 시범 실시해 실제 운행환경에서 안전성을 검증
- 이용수요·지역 형평성·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열차운행계획을 마련함.
- 또한 8월 3일 ‘코레일톡’과 ‘SRT’로 분리 운영되던 예매 앱을 통합한 ‘코레일+’ 앱을 출시함.
-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력정원 협의와 기업결합 심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
- 사업양수도 인가·철도사업계획 변경·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등 필요한 법정·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해 9월 1일 통합을 위한 준비를 마침.
- 통합 조직은 열차운행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 코레일 조직 내에 ‘통합사업관리부문’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에 필요한 자율적 권한을 부여함.
- 통합사업관리부문은 최대 3년간 조직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되, 1년 후 통합 이행 정도와 조직 안정화 상황 등을 평가해 운영기간을 결정할 계획임.
- 인력은 SR 직원의 기존 근로조건 유지 등을 전제로 포괄 고용승계하고, 고용·직무·보수·복지 등 세부사항은 노사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임.
- 9월 1일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주요 변화를 시행하며, 양사의 공공할인·임산부·청년 할인 등 각종 서비스도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합함.

| 구분      | 9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
|---------|--------------------------------------|
| 좌석공급    | · 주중 하루 약 1.5만석, 주말 최대 약 1.7만석 추가 공급 |
|         | · 수서축 좌석 약 30% 확대                    |
| 운임·마일리지 | · KTX 운임을 기존 SRT 수준으로 조정하여 평균 10% 인하 |
|         | · 수서축 노선에도 결제금액 5% 마일리지 적립           |
| 예매편의    | · 통합앱 '코레일+'에서 모든 열차를 한번에 검색         |

-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부터 기존 KTX-산천보다 편성당 약 90석이 많은 신규 고속철도 차량 31편성을 순차 도입하고,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등 철도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 정부와 코레일은 통합 이후 안전 최우선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양 기관의 역량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한편, 재무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통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임.
- 고객만족도·정시성·예매 편의·안내체계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 수준을 지속 점검하고, 고객의 소리(VOC) 등 이용객 의견을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 통합 이후에도 노사정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임.

- 특히 에스알 직원의 고용·처우 보호와 제반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지속 점검할 계획임.
- 통합 이후에도 안정적인 철도서비스와 안전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계획임.
- 또한 좌석 공급 확대에 따른 운송수입,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및 재무지표 등을 지속 점검해 국민편익과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갈 계획임.
- 코레일·에스알 양사 노사는 통합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통합 기반을 마련했으며, 통합 이후에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 화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할 계획임.
- 특히 철도 안전과 국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양 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할 예정임.

## 시정 동향

1

### 상수도사업본부, 'AI 활용 수질예측·조기경보 시스템' 첫 개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수질 예측 및 조기 경보시스템'을 개발·도입해 AI 업무 혁신 우수사례로 인정받음. 송근일 환경연구사가 지난 5월 AI 바이프 코딩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

※ 인공지능(AI) 바이프 코딩 :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 방식

- 이 시스템은 장마철·갈수기 등 반복되는 수질 악화 패턴을 분석해 향후 30일 이내 수질 이상 항목과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경고함.
- 또한 수질 이상 감지 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자동 제공해 신속한 현장 조치를 지원함.
- 기존 정수장 수질관리는 관리자료가 문서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분산돼 수치 흐름과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또한 수질 이상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직접 확인해야 해 직원의 숙련도에 따라 현장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음.
- 시스템 도입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민원 발생 후 대응하는 사고 대응체계에서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예방체제로 전환해, 안전하고 질 높은 수돗물 생산을 강화할 수 있게 됨.
- 시스템 도입으로 망간·조류 등 다중인자 가중치를 반영한 염소 소모량 자동 계산이 가능해져, 연간 약 1,200만 원의 약품비 절감이 기대됨.
- 또한 자체 개발을 통해 약 1억 원의 외주개발비를 절감하고, 데이터 가공 수작업을 줄여 행정 효율성도 향상됨.
- 이번 시스템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대기배출시설 분석시스템’과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수질 민원 관리 시스템’ 등에 벤치마킹되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확산하고 있음.

- 또한 9월 2일 민형배 특별시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대표적인 AI 업무혁신 우수사례로 보고됨.
-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현장 공무원의 AI 활용을 통한 상수도 행정 혁신과 예산 절감 성과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2

### 예산담당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추경 예산 3천458억 편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민형배 특별시장 1호 지시인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대책’ 과 필수 현안사업을 반영한 3,458억 원 규모의 2026년 민선9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함.
-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22조 3,504억 원보다 1.6% 증가한 22조 6,962억 원 규모로 편성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8조 4,803억 원(1.5%↑), 특별회계 2조 7,389억 원(2.1%↑), 기금 1조 4,770억 원(1.1%↑)임.

\* 총재정규모: 22조 6,962억 원(본예산 22조 3,504억원 대비 3,458억 원 증, 1.6%↑)  
 - 일반회계 : 18조 4,803억 원(기정 18조 2,064억 원 대비 2,739억 원 증, 1.5%↑)  
 - 특별회계 : 2조 7,389억 원(기정 2조 6,827억 원 대비 562억 원 증, 2.1%↑)  
 - 기금 : 1조 4,770억 원(기정 1조 4,613억 원 대비 157억 원 증, 1.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소상공인·중소·수출기업의 경영 안정과 주거·의료·서민금융 등 시민 생활 안정, 농축산·어업·임업 등 경제활동 지원에 예산을 집중 배정해 실효성 있는 민생시책을 추진할 계획임.

- 농수축산업과 지역인재 육성, 미래산업 개발, 지역 의료·출산·보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도 추가 편성함.
- 특히 농수축산업 분야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 원, 농경지 배수개선 76억 원, 가축백신 지원 23억 원, 수산물 신규 수요처 발굴 15억 원 등을 반영함.
-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165억 원, AI영재학교 설립 14억 6천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864억 원을 반영함.
-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20억 원, 자율주행 부품융합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26억 원, AI 기반 고부가 발포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10억 원 등을 편성함.
- 지역 의료 및 출산·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60억 원, 지역거점병원 필수의료 강화 16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30억 원, 초등 방학 틈새돌봄 17억 원 등을 편성함.
- 주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32억 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00억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170억 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114억 원 등을 편성함.
- 또한 K-패스·G-패스 환급지원 53억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2억 원, 지방도 정비 30억 원,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22억 원 등을 반영해 시민 경제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전남광주특별시와 울산시는 자동차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을 통한 미래차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을 공동 추진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울산광역시는 7일 울산에서 자동차산업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협의회를 개최함.
- 이날 협의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울산광역시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해 자동차산업의 AI 전환 방안을 논의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울산광역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위험·고난도 공정 기피에 따른 현장 인력 공백에 대응하고, 휴머노이드와 노동자가 협업하는 생산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차 제조업 AI 전환(M.AX) 협력사업을 추진함.
- 이번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울산광역시가 각각 290억 원(국비 150억 원·지방비 140억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양 도시에 각각 45억 원씩 총 90억 원이 반영됨.
- 양 도시는 협력사업을 통해 자동차 의장공정 휴머노이드 실증센터 구축, 제조 휴머노이드 양성·실증 플랫폼 구축, 휴머노이드 내구·신뢰성 실증 인프라 구축, 제조업 AI 전환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이날 참석자들은 현대차·테슬라 등 완성차 업체의 휴머노이드 도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대표 자동차 생산도시 간 협력 의지를 다짐함.

## 타 시 도 동 향

1

### 서울, 중소 건설사 공사비 산정 자원, 공사절차서·해설서 전국 최초 보급

- 서울시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 강화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사 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해설서’를 개발해 9월 중 제작·배포할 계획임.

※ 품셈 : 건설자재 설치시 소요되는 노무량을 수치화한 정부가 개발한 공사비 산정기준

- 지난해 하반기 소통 간담회에서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 역량 부족과 산정기준 이해도 미흡으로 적정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는 협회·연구기관 등 전문기관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0개월간 공사 절차서와 품셈 해설서를 개발함.

- ‘공사 절차서’는 전기설비 분야 공종별 작업순서를 표준화해 작업 지연과 분야 간 간섭에 따른 재시공을 방지하고, 설계변경 공사비 누락 등으로 인한 중소건설업체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함.

※ 공종 : 건설자재 설치과정

- 서울시는 50개 건설현장을 조사하고 현장소장 등 숙련기술자 250여 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 노하우를 수집·반영했으며, 전기분야 교수·기술사·연구기관 등 70여 명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신 공법·기술 및 설치사례를 반영한 전기분야 건설공종 94개를 개발함.

- 

시공의 표준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실무 지침서

# 공사 절차서



서울특별시

**5-46-디 || 교통정보용 지주 기초 조립앵커볼트 설치**

**1. 개요**

○ 교통정보용 지주 기초 조립앵커볼트를 터파기(굴착)한 구멍이 속해 넣고 설치하는 공정을 규정하고 있다.

**2. 기본분**

〈전기통신용 5-46-디〉 교통정보용 지주 기초 조립앵커볼트 설치 (단위: 개/노)

| 구격           | 내선전공 | 보통인공 | 암거사용시간 (hr) |
|--------------|------|------|-------------|
| 내경 200 mm 미만 | 0.04 | 0.06 | 0.16        |
| 내경 200 mm 이상 | 0.05 | 0.1  | 0.22        |

**【비고】**

  - ① 앵커볼트 4개/노를 1개/노 조립하여 교통정보용 지주 사용하는 앵커볼트의 설치로 콘크리트 타설(콘크리트역시)으로 사용과 동시에 설치 기준
  - ② 지중은 암거라도 내경 기준
  - ③ 암거사용시간은 암거의 기준
  - ④ 동일 현장 내 구역 관계없이 전체 설치 개수가 1개/노 초과 시 개/노당 각 해당공의 90% 적용
  - ⑤ 평면공간의 비라 "1-34 기체정기 작업능의 산정 (타) 관수 내용 외 작업개수"를 준용 적용
  - ⑥ 터파기, 절토, 절리 및 조립앵커볼트 파열 제거의 별도 계량

**3. 용어의 개념**

○ 교통정보용 지주 기초 조립앵커볼트 앵커볼트 4~8개를 1개/노 조립하여 교통정보용 지주 기초에 사용하는 앵커볼트를 일함

**4. 형상 및 사진**






교통정보용 지주 기초 조립앵커볼트      앵커볼트      교통정보용 지주 기초 조립앵커볼트 설치

**5. 작업 절차서**

가. 사전 공영

○ 교통정보용 지주 기초 조립앵커볼트 설치 시, 조립앵커볼트를 터파기 장소에 설치하는 방법 가. 설치 순서

작업 준비

설치 위치 확인

표장 제거

터파기 타설

앵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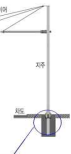
조립앵커볼트 설치

기초매입매와 설치

콘크리트 타설

퇴매우기

작업 정리


\*   는 폭경 5-46-디 교통정보용 지주 기초 조립앵커볼트 설치 포함 작업

**5. 작업 절차서**

가. 설치 공영

○ 설치위치 선정 → 표장 제거 → 터파기(굴착) → 앵커 설치 → 조립앵커볼트 설치 → 콘크리트 타설 → 퇴매우기

나. 작업 절차서

| 작업 시간                                                                                | 작업 설명서                                                                                                                                             |
|--------------------------------------------------------------------------------------|----------------------------------------------------------------------------------------------------------------------------------------------------|
|    | <b>1. 설치위치 선정</b><br>- 도면을 참조하여 설치위치를 확정한다. 필요시 카라모 표시한다.                                                                                          |
|                                                                                      | <b>2. 표장 제거</b><br>- 굴착 지점 표장을 제거한다. (별도 계량)<br>- 용고: 건설교통 3-1 도로표장공사                                                                              |
|    | <b>3. 터파기(굴착)</b><br>- 굴착기를 이용하여 기초 위치를 터파기(굴착)한다. (별도 계량)<br>- 용고: 건설교통 3-2 굴착<br>- 터파기 깊이를 측정하여 적정한 깊이와 넓이를 확보한다.<br>- 비파괴: 건설교통 3-8 지중시공을 참조한다. |
|                                                                                      | <b>4. 앵커 설치</b><br>- 설치위치나 설치용량을 설치하고 설치시간을 연월한다. (별도 계량)<br>- 용고: 전기통신 3-38 철근공사                                                                  |
|   | <b>5. 조립앵커볼트 설치</b><br>- 조립앵커볼트를 굴착기에 로프로 묶어 터파기 된 장소에 넣는다.<br>-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다.                                                                |
|                                                                                      | <b>6. 콘크리트 타설</b><br>- 조립앵커볼트를 움직이지 않도록 굴착기로 눌러 고정한다.<br>- 펌프시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붓는다. (별도 계량)<br>- 용고: 건설교통 3-6 콘크리트                                    |
|  | <b>7. 퇴매우기</b><br>- 굴착기를 토사를 퇴매우기하고 안전조치를 한다. (별도 계량)<br>- 용고: 건설교통 3-4 복기                                                                         |

\*   는 폭경 5-46-디 포함 작업

- 19 -

- 해설서는 건설연구원과 협회·설계사·제조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자료 수집·검증·보완체계를 구축하고, 공종별 용어 설명과 500여 개 형상·시공 자료 및 100여 개 시공사진을 수록해 개념 이해부터 과다·과소 산출 요인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부 기계설비공사 76개 공종을 개발함.
- 특히, 품셈 적용 예시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제시해 적용 오류를 예방하고,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쉬운 문장으로 설명해 초보 실무자부터 숙련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실무서로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공사 표준품셈 해설서**

- 설계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 기초
- 현장 활용 중심의 공사설계 실무

서울특별시

**2-2 덕트기구**

**2-2-4 열변형배사각기 설치**

(기계설비품셈 2-2-4 열변형배사각기 설치)

| 구분 | 단위 | 방화덮개  | 통량조절덮개(수동식) |
|----|----|-------|-------------|
| 단  | ㎡  | 0.415 | 0.375       |

· 덮개면적 0.1㎡이하 기준으로 0.1㎡ 중이라 다음 중을 가산한다.

| 구분 | 방화덮개  | 통량조절덮개(수동식) |
|----|-------|-------------|
| 단  | 0.125 | 0.110       |

【주】본 품은 덕트, 덕트, 기기의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가 용도 및 특징**

- 덕트 시스템에서 공기나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고 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조절장치가 사용되는데 이를 덤퍼(Damper)라고 한다.
- 덕트의 형태에 따라 원형이나 사각형으로 제작되며, 전동모터나 압축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구동기가 설치되어 원격 제어되기도 한다.
- 방화덮개(FD): 건물의 방화구역을 구분하는 덕트에 설치되어 화재가 발생한 구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덤퍼에 유체가 설치되어 있다. 화재시 열기에 의해 유체가 끊어지게 되면 스프링의 힘에 의해 날개가 닫혀 공기 흐름이 폐쇄되므로 화재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연기감지형 방화덮개를 포함한다.
- 통량조절덮개(VD): 예인덕트와 분기덕트의 연결부분 또는 덕트의 토출구나 흡입구 근처에서 풍량을 제어하고자 할 경우 사용한다.

**나. 형상 및 시공**



**다. 표준품셈 적용 및 유의사항**

- 열변형배사각기 설치: 방화덮개(FD)와 통량조절덮개(VD) 두 가지로 구분하며, 덮개면적(㎡)을 기준으로 덕트공의 노무량을 감소할 수 있다.
- 적용예시: 방화덮개(300×600)  
0.3㎡×0.6㎡×0.18㎡, 그러므로 0.415×0.125×0.540

| 품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적용비 |    | 노무비     |         | 합계      |    |
|-----------------|----|-------|----|-----|----|---------|---------|---------|----|
|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방화덮개(300×600)   | 단  | 0.540 | ㎡  |     |    | 302.472 | 165.335 |         |    |
| 통량조절덮개(300×600) | 단  |       | ㎡  |     |    |         |         | 108.335 |    |
| 합계              |    |       |    |     |    |         |         |         |    |

**【유의사항】**

- 본 품은 덕트의 덕트, 기기의 설치 및 고정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인력들을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 연기감지형 방화덮개 경우 전기배관 및 인선운 병도 인력들을 계상할 수 있다.
- 덕트의 본류에 따라 방화덮개 또는 통량조절덮개를 구분하여 품을 정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방화덮개는 덮개면적 0.1㎡ 이하 기준으로 덕트공 0.415인을 적용하고 면적이 0.1㎡ 중이라 덕트공 0.125인씩 가산하여 적용한다.
- 통량조절덮개는 덮개면적 0.1㎡ 이하 기준으로 덕트공 0.375인을 적용하고 면적이 0.1㎡ 중이라 덕트공 0.110인씩 가산하여 적용한다.

- 시공사 대상 교육은 '25년 상반기 규제철폐 후속 조치로 추진한 '찾아가는 교육·컨설팅'을 확대해, 더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는 건설협회 건의를 반영함.

- 중소건설업체의 설치 항목 누락, 연계 공종 혼동, 할증 적용 오류, 신공법 이해 부족 등 공사비 미반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제 공사비 산정서 작성·검토 과정을 재현한 교육 방식을 도입함.
- 올해 7월까지 집합교육 7회에 200여 개 중소건설업체 실무자 282명이 참여했으며,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서울시는 새로 개발한 ‘공사 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 (품셈) 해설서’를 하반기 교육과정에 즉시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임.
-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을 높이고 적정 공사비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위험작업 할증·적정 건설장비 등 안전 관련 비용 반영을 확대해 안전과 품질을 함께 확보할 계획임.
- 공사 절차서와 품셈 해설서는 9월 중 전자파일과 인쇄본으로 배포하고, 전자파일은 서울시 및 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서울시는 건설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자료를 개선하고 교육·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실무자가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를 직접 산정·설계·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8일 춘천시 동산면에서 ‘강원·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준공식을 개최하고, 곤충산업 거점단지 본격 운영에 들어감.
- 이번 거점단지는 곤충 분야 전국 거점단지 중 전국 최초로 준공된 사례로, 총 200억 원을 투입해 2만 3,815㎡ 부지에 연면적 4,154㎡ 규모로 조성됨.
-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곤충산업 1호 거점을 선점하고 10조 원 규모 그린바이오 시장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함.
- 핵심 경쟁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기획하고 춘천시와 협력해 구축한 완전 분업형 상생 모델에 있음.
- 거점단지가 우수 종충 원종을 공급하고 지역 농가는 종충 증식에 전념하도록 해 판로 불안과 품질 편차 문제를 해소함.
- 거점단지는 증식 물량을 전량 구매해 표준화된 대량생산·전처리·가공을 담당하고, 농가는 재고 부담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며 고품질·균일 원료를 확보하는 상생형 생산체계를 구축함.
- 또한, 도는 단지 내 핵심 시설인 ‘스마트팩토리팜’에 자체 보유 특허 5건을 100% 적용해 기술 자립 기반을 확보함.

- 사육 전 과정에 AI·로봇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생육 제어를 구현하고, 전국 최초로 사육·생산 전 과정에 스마트 안전 위생기준(HACCP)을 적용해 제약·식품 대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바이오 원료 생산체계를 구축함.
- 춘천시와 협력해 공공형 탄소중립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산지유통센터(APC)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을 곤충 사료로 활용해 농가 사료비를 절감하고 연간 120톤 이상의 탄소배출 저감을 추진함.
-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LG CNS·한미양행·OMO와 그린바이오 곤충산업 육성 및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강원산 안전 원료를 기반으로 푸드테크·메디푸드 신시장 개척을 위한 밸류체인 구축에 나설 계획임.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 최초 곤충산업 거점단지 준공을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며, 농가는 종충 생산, 거점단지는 생산, 기업은 판매를 담당하는 상생 모델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첨단 신산업 육성을 추진 하겠다고 밝힘.

### 3

## 경 남, 기본사회 정책 발굴·실행체계 마련

- 경상남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본사회 정책 교육’을 실시함.

- 이번 교육은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주도의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기본사회’는 생애 전반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돌봄·의료·주거·교육·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를 의미함.
- 교육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서비스 발굴과 정책 구체화를 위한 도·시군의 정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과제 발굴·추진체계 마련·계획 수립 등 지방정부의 실행 역할을 함께 살펴봄.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소득·일자리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말아, 기본사회·기본서비스의 개념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본사회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함.
- 경남도는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도·시군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인구구조와 생활여건을 반영한 기본사회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정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추진체계와 계획 수립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임.
-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본사회 실현에 중요하다고 하며, 경남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힘.